이재명 "호우 피해 현실적 보상 지원 노력"

〈더불어민주당 대표〉

익산 망성면 피해 현장 등 찾아 주민의 피해사례 경청

정헌율 시장, 빠른 복구 위한 범정부 차원 지원 요청

민주, 호우 피해 지원 위한 여·야·정 TF 구성 제안

정헌율 익산시장이 18일 수해 피해 현장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빠른 복구와 피해지원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현실적인 지원을 강력 요청했다.

특히, 기록적 폭우로 농촌지역 곳곳이 큰 상처를 입은 상황을 설명하며 막대한 농경지 침수피해를 입은 농민들을 위한 특별지원을 건의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익산시 망성면 피해 현장과 주민 대피소 등을 찾아 심각한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주민들의 생생한 피해사례를 경청했다. 또한 김관영 전북도지사, 한병도·김수흥·안호영·이원택 국회의원, 최종오 익산시의회의장 등과 함께 침수된 비닐하우스, 농경지 수해현장 곳곳을 둘러본 후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수해현장에서 정 시장은 이재명 대표에게 "전국 4번째 쌀 생산지인 익산의 벼재배 면적 27%와 시설원예 60% 이상이 침수로 잠겼고, 800여 이재민이 발생했다"며 "2차피해 차단과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특별지원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익산지역에서만 도로, 농업기반, 하천, 산사태를 비롯해 농작물 4,420ha를 비롯해 시설원예 542ha, 축사 침수로 가축 20만4,600여 마리 폐사 등 침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농촌지역 복구에 가장 필요한 관리기, 트랙터, 열풍기, 양수기 등 농기계 1만8천여대가 물에 잠겨 비가 그쳐도 당장 피해복구에 난항이 예상된다.

농기계만 200여억원이 넘는 재산피해와 함께 현재까지 농경지와 도로침수, 배수로 정비 등 민간과 공공부문의 피해 추계액만 520억원에 달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익산시 망성면 성북초등학교에 마련된 주민 대피소를 찾아 수해지역 피해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익산시청 제공〉

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집중폭우가 최고 533㎜에 달해 하천, 도로, 농경지, 문화재 등 지역전역에 피해가 발생했다"며 "앞으로 복구를 위한 피해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피해 차단을 위해 익산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정부에서도 빠른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피해복구 인력 투입 등의 문제를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다"고 건의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문제는 당이 정부에서 요청해 최대한 빨리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동시에 법 개정 문제라서 쉽진 않겠지만 현실적 보상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한 여·야·정 TF 구성을 제안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정 TF에서 피해 복구와 지원은 물론이고 재난 대응체계를 전면 개선하는 등 재난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수해 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정부에 요청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1기업-1공무원 전담제 대상기업 모집방법 개선을"

도의회 농산경위, 도 기업유치 지원실 등 업무보고 청취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나인권)는 18일 제402회 임시회 기간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 전북신용보증재단, 자동차융합기술원에 대한 2023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먼저, 나인권 위원장(김제1)은 전북도가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노력 중인데 한국투자공사가 이전하지 않겠다는 일각의 발언과 관련,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된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한 내용이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기본계획에도 포함되지 않은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별도로 한다는 방침에는 쉽게 공감하기 어렵다"며 이에 대해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세부적인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최형열 의원(전주5)은 "1기업-1공무원 전담제는 도내 기업 수요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500개 기업 선정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선정과정에서 애로를 겪는 기업을 배제하는 문제점도 보인다"며 "어려운 기업을 모집하여 사업을 진행한다는 취지에 맞도록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김대중 의원(익산1)은 "전라북도만의 특색있는 일자리가 매우 부족하고 연계선상에서 인력이 유출된다"며 "특색있는 일자리 개발에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도민들은 금융중심지 지정으로 인한 전라북도의 이점을 쉽게 인지하기 어렵다"며 "주먹구구식 절차진행이 아닌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과 홍보를 충분히 하라"고 강조했다. /김재훈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호우 피해 입은 비닐하우스 찾은 한덕수 총리

18일 익산시 용안면 수해현장을 찾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김관영 도지사에게 피해상황을 보고 받고 호우 피해를 입은 어느 비닐하우스를 찾아 깨진 수박을 살피고 있다. 〈사진=전북도청 제공〉

'국보법 위반 무죄' 이광철 전 의원, 형사보상금

1억7000만원 받게 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이광철(67) 전 국회의원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전주지법은 18일 관보를 통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이 전 의원에게 형사보상금 1억70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1982년 7~8월 언론, 통일문제, 학생운동 등에 관한 민주화 교육을 받은 다음 다른 사람을 의식화 교육한 혐의로 국군보안사령부 수사관에게 체포됐다. 이후 1983년 5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그해 11월 형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1년4개월 후 형집행 정지로 풀려났다.

지난해 7월 7일 전주지법은 이 전 의원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뉴시스

"집중호우 사후 수습 제대로 나서야"

민주 윤준병 의원, 정책조정회의서 "尹정부, 재난 감수성 없어"

논콩 농작물 피해 농가 지원·특별재난관리지역 지정 등 강조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정읍·고창 국회의원, 국회 농해수위)가 18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재난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엔 재난 감수성이 없다"며 "집중호우에 대한 사후 수습에라도 제대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진행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준병 의원은 "작년과 같은 비극이 또 되풀이됐다"며 "작년 집중호우로 반지하주택·지하주차장이 침수되면서 28명이 사망하는 비극을 겪은 데 이어, 올해도 저지대 침수와 산사태로 41명이 사망했다(18일 오전 6시 기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며 사망자의 명복을 빌었다.

이어 "일찍이 예보된 집중호우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사전 대피와 통제를 확실하게 하겠다'고 공언했다"며 "하지만,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등 수해 피해가 속출했음에도 안이한 대처로 일관했고, 결국 인재(人災)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더 큰 문제는 국가적 재난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에는 재난 감수성이 없다는 사실"이라고 꼬집으며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는데도, 재난 현장에는 대통령도, 정부여당 대표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대통령이 서울로 간다 해도 상황을 크게 바꿀 수 없다'는 대통령실의 발언과 수백톤 바위가 굴러 내려온 예천 산사태에 대해 '평범한 산사태로 알았다'는 대통령 발언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을 포기했다는 방증"이라며 "대통령이 국정의 컨트롤타워로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직접 대응시스템을 지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국익은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윤준병 의원은 "작년 수해 피해 당시에도 윤 대통령은 조기 퇴근을 하는가 하면, 침수된 반지하주택을 찾아 '왜 미리 대비가 안됐는지 모르겠다'며 낮은 재난 감수성을 드러냈다"며 반복되는 국가적 재난에도 낮은 재난 감수성으로 참사를 되풀이하는 윤석열 정부를 질타했다.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이번 집중호우에 대한 사후수습에라도 제대로 나서야 한다"며 "사망자에 대한 수습과 장례 절차는 물론,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한 피해 보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농경지 침수 현장을 확인한 결과, 정부가 쌀 생산조정을 위해 권장했던 논콩·가루쌀 등의 농작물 피해 농가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며 "농약 지원, 재해보험 개선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대책이 제대로 강구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수해 피해가 집중된 지역에 대해서 특별재난관리지역 지정도 서둘러야 한다"며 "시군 단위뿐만 아니라 읍면 단위의 지정도 함께 검토해 재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국가 재난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가적 재난이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장수군의회, 집중호우 피해상황 긴급 점검

장수군의회(의장 장정복)는 17일, 국도13호선 임실-장수간 국도시설 개량공사 현장과 용추천 인근 농경지 등을 방문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023년 하반기 의사일정에 돌입한 장수군의회는 현재 제352회 임시회 기간으로, 연일 폭우가 계속되며 군민들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이날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 일정을 마무리한 후 곧바로 현장을 찾았다.

장수군의회는 향후 재해취약지 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예찰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장수=고판호 기자